

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충청남도 유성구	
후보자명	이상민	기호		소속정당명	민주통합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				
<div>[정책목표]</div> <div><div>·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로 과학기술과 IT컨트롤타워 부재 심화</div><div>· 과학기술부 부활, 정보통신부 부활시켜 과학기술발전과 IT강국 실현</div></div> <div>[추진계획]</div> <div><div><div>- 추진방법</div><div><div>·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을 분리, 방통위와 문광부 등에서 IT정책 분리</div><div>· 법률개정</div></div></div><div><div>- 기한·프로세스</div><div><div>· 2012년 19대 국회 출범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</div><div>·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 여론조사 실시</div><div>· 입법발의, 2016년까지 국회통과 추진</div></div></div><div><div>- 입법조치사항</div><div><div>·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(2012)</div></div></div></div> <div>[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]</div> <div><div>·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예산에 반영, 추후 비용추계</div></div>					
공약번호: 2	공약 제목 : 과학벨트 완성				
<div>[정책목표]</div> <div><div>· 과학벨트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과학기술발전과 과학도시 대전을 세계적 과학도시로 육성</div><div>· 기초과학의 집중투자로 노벨상 수상자 배출</div></div>					

[추진계획]

-추진방법

- 2012년부터 예산이 본격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과학벨트를 당초 계획대로 완성시키기 위한 예산확보활동 강화
- 추진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개정
- 정부와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
-기한·프로세스

- 2017년까지 총 5조2천억원 예산 투입
- 거점지역인 대전유성(신동 둔곡지구)예산 2조3천억원 확보 총력
-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예결위활동 전개

- 입법조치사항

- 2013년 예산안 반영

[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]

- 국책사업으로 정부가确定的 5조2천억원 국비 매년 연차별로 확보
- 거점지구인 대전유성(신동 둔곡지구)예산 2조3천억원

공약번호: 3

공약 제목 : 전민동-구즉동-관평동-과학벨트거점지역(신동 둔곡지구)-세종시-오송 지하철 추진(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)

[정책목표]

- 세종시와 과학벨트로 인해 대전유성지역 교통체계의 전면 재구축
- 대전유성과 오송, 세종시를 잇는 지하철 추진(도시철도2호선 연계)

[추진계획]

- 추진방법

-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과 연계하여
전민동-구즉동-관평동-과학벨트거점지역 (신동 둔곡지구) -세종시-오송 지하철
추진
- 도시철도2호선의 유성지역 (전민동-구즉동-관평동) 통과를 위한 대전시와의 협의
추진
- 추진위원회 결성

- 기한·프로세스

- 2012년 기재부 예비타당성검토 의뢰
- 2013년부터 국비반영토록 예결위활동 강화
-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여론조성 및 지원활동 전개

- 입법조치사항

- 없음

[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]

- 추후 비용추계

공약번호: 4

공약 제목 : 유성복합터미널 조기 구축

[정책목표]

- 1970년대 세워진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은 평상시 심각한 차량정체로 승객불편과
인근 지역주민 불편초래
- 도심 종합터미널로서의 기능 약화로 복합터미널 조기 구축 필요

[추진계획]

- 추진방법

- 구암동 도시철도 구암역인근 10만 2,080평방미터 부지에 4,157평방미터 규모의
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조기 구축
- 대전시에서 민자유치로 추진, 국비예산 확보

- 기한·프로세스
 - 2013년부터 추진
 - 대전시의 민자유치와 연동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
- 입법조치사항
 - 없음

[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]

- 소요예산 2,000억~2,500억, 민자유치 (대전시계획)
- 2013년 국비 예산반영

공약번호: 5

공약 제목 :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 확인

[정책목표]

- 우리나라 ' 노인 빈곤율 ' 은 45%로 OECD 평균 13%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은 70% 노인에게 월 9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음
- 이는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%에 불과하여 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
- 노인들의 노후생활 최소 보장

[추진계획]

- 추진방법
 -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%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10년 단축
 -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(' 12년) A값의 5%에서 매년 1%씩 인상하여 (' 17년) 10% 달성 (A값 : 연금수급 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)
- 기한·프로세스
 -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을 현재 노인의 70%에서 2014년까지 80%로 확대, 이후 노인빈곤율을 분석하여 2017년 90%까지 확대 방안 검토

- 입법조치사항
- 기초노력연금법 개정
- 2013년부터 예산안 반영 추진

[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]

- 2010년 375만명에게 3조 7,000여억, 2017년 9조원 예상
- 민주통합당 정책위와 협의, 국회예결위 활동을 통해 예산확보